

「2013 확산탄 세계투자: 공동의 책임」 보고서 발표에 부친 시민사회단체 공동서한

발 신: 국민연금 확산탄 투자철회 공동행동(참여단체: 하단 발신처 참조)

수 신: 보건복지부 장관(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참 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담당자

날 짜: 2013. 12. 12.

*발신처: 경계를넘어,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나눔문화, 남북평화재단, 무기제로,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국민연금 확산탄 투자철회 공동행동 소속 12개 단체는 국민연금이 대표적 비인도무기인 확산탄을 생산하는 한화와 풍산에 상당한 기금을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지난 2013년 4월 3일을 기해 국민연금 확산탄 투자철회를 촉구하는 국민적인 캠페인을 출범시켰으며, 이 활동의 결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시민들의 탄원서를 전달(2013.5.27.)하고 국민연금 기금의 확산탄 생산기업 투자철회 및 확산탄 등 비인도무기 생산기업에 대한 투자를 전면 금지하는 윤리투자원칙 도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해 금일 네덜란드에 소재한 국제 NGO인 IKV 팩스크리스티는 「확산탄 세계투자: 공동의 책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대표적 비인도무기로 국제적으로 금지된 무기인 확산탄을 생산·개발·수출하고 있는 요주의 기업 목록(총 7개 기업)을 선정해 해당 기업에 금융지원 및 투자를 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금융기관의 목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여전히 요주의 기업 목록에 포함된 확산탄 생산 기업인 한화와 풍산의 최대 투자자 중 하나로 이 두 기업의 주식을 상당 규모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4. 확산탄은 광범위한 지역에 수많은 작은 폭탄들을 흩뿌리는 산탄형 폭탄으로, 사용시에 군사표적과 민간인을 구별하지 못하고 넓은 지역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무차별 살상무기입니다. 확산탄은 사용 이후에도 수많은 불발탄(UXO, unexploded ordnance)들을 남겨 해당 지역에 대인지뢰처럼 심겨져 있다가 후에 이를 발견하는 민간인들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대표적인 비인도무기로 현재는 확산탄금지협약에 의해 사용·생산·비축·이전이 국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2013년 12월 현재 동 협약의 당사국은 84개국이며 29개국이 비준 절차를 밟고 있는 등 총 113개국이 확산탄을 금지시켰습니다.

5. 우리는 거듭되는 시민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에게 용납할 수 없는 해를 끼치는 확산탄을 생산하는 기업에 여전히 엄청난 규모의 국민연금기금이 투자되고 있다는 사실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한국의 상황과 달리 세계는 확산탄과 같은 비인도무기 생산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금지하는 방향으

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13 확산탄 세계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민연금과 유사한 공적연금이자, 규모 면에서 세계 2,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연기금인 노르웨이국영연금과 네덜란드 ABP의 경우 이미 각기 2005년과 2007년 확산탄 생산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시켰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확산탄 생산 기업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내법을 제정한 국가도 4개국으로, 이로써 현재 확산탄 투자를 법률로써 금지하는 국가들도 총 9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더해 확산탄금지협약에 의거해 확산탄투자를 금지하겠다고 선언한 국가도 27개국에 달합니다. 이제 세계는 확산탄의 생산·수출에 못지않게 이에 대한 투자 역시 비난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6. 국민연금기금은 지난 4월 3일 공동행동이 발송한 서한에 대한 답변서(국민연금공단 운영기획부-1696, 2013.04.17)에서 기금운용의 목적이 연금재정의 장기재정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확산탄 생산기업에 대한 투자행위가 단순히 안정적 연금재정 확보를 위한 중립적 활동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업에 대한 투자행위는 결국 해당 기업의 사업목적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화와 풍산의 최대투자자로서 국민연금기금은 확산탄 생산기업의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확산탄의 생산·수출을 촉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36개 국가가 국내법 및 확산탄금지협약에 의거 확산탄 생산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시키고, 세계 유수의 연기금들이 확산탄 생산기업을 자사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것도 바로 금융기관들이 가지는 그 같은 영향력과 책임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7. 우리의 행복한 노후를 보장받기 위한 사회연대보험 제도인 국민연금이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무차별 살상무기 생산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용납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한국 최대규모의 공적자금이자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인 국민연금이 그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여 확산탄과 같이 국제적으로 비난 받는 무기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 앞으로도 이와 같은 비윤리적 투자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연금이 비인도무기 생산기업에 대한 투자를 배제토록 하는 윤리투자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기금 운용시에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2009년 7월, 금융기관의 투자결정시 투자대상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슈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UN PRI(유엔 책임투자원칙)에 가입하고 사회책임투자를 확대해가겠다고 수 차례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연금이 그 같은 약속을 온전히 실천할 때입니다.

2013. 12. 12.

국민연금 확산탄 투자철회 공동행동

※ 붙임: 2013 년 「확산탄 세계투자: 공동의 책임」 보고서 발췌번역본 1 부. 끝.